

북한과의 다양한 대화가 신뢰 쌓기의 해법이다

길 정 우 / 새누리당 국회의원

작년 12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와 올해 2월 3차 핵실험 이후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은 출범부터 고민에 빠져있다.

대선 공약을 내세웠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생각대로 펼칠 수 있을까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전 이명박 정부와 다른 점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에 대해서도 뚜렷하게 답을 주고 있지를 못하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대선직후부터 북한이 새로운 한국정부를 시험하기 위해 어떤 형태로든 도발적인 언행을 펼칠 것이라 예측해 왔다. 하지만 대선기간 내내 남북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와 협력을 강조해 왔던 까닭에 이를 실천하기 위한 분위기 조성엔 북한이 협조해 주기를 은근히 기대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다. 북한의 신년사에서 보듯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누그러진 어조에서 그러한 기대감을 확인하기도 했다.

그러나 2월 핵실험을 시작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중심의 대북제재 논의와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 및 호전적 행보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작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회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새 정부가 공식 출범하기 이전이긴 했지만

대통령 당선인과 주변 참모들의 입에서 북한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응징의 목소리가 튀어나왔고 정작 하고 싶었던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신뢰구축이란 얘기는 뒷전에 밀렸다. 며칠 후 충격에서 깨어난 새 정부는 단호한 대응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창은 열려있다는 원칙론적인 입장표명으로 회귀했다.

출범 초반부터 갈 길을 잃을까 우려했던 대북자세가 나름대로 큰 틀을 벗어나지 않은 것은 향후 5년 새 정부의 대북정책에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행보였다고 하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 북한 핵실험 이후 호전적 언행과는 별도로 핵문제라는 근원적인 위협과 도전에 대한 대응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호전적이고 도발적 언행에 집중하다보면 문제의 근원인 핵무기 개발과 장거리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관심이 흐려지고 아울러 북한의 기술수준을 기정사실화하는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다시 말해 북한 핵실험 이후 한국과 미국을 향한 호전적 언행은 한국과 미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강경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현실적 군사력을 엄중 평가하게 되고 결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기정사실화한 바탕 위에서 대응책의 수준과 범위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계산을 북한은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강변(?)에 결국은 굴복하게 된다는 것이 북한의 의도라면 어느 정도는 먹혀들고 있다고 하겠다.

한국의 새 정부는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의 긴장상황을 안고 출발했다. 하지만 향후 사태 진전에 따라서는 더 이상 악화될 수 없는 단계까지 간 극한상황에서 점차 문제해결에 돌입하고 점진적으로나마 남북 간에 신뢰를 축적해 갈 수 있다는 역설적인 낙관론도 가능하다. 그리고 상호 신뢰는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가능해 지는데 새 정부의 첫 과제는 어떻게 대화의 단추를 끼울 것인가에 있다고 하겠다.

남북대화가 중요한 몇 가지 이유

당연한 얘기이지만 남북 간에 대화가 필요한 이유를 다시금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어떤 형태로든 대화가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한반도 내 긴장상황이 상당히 해소된다는 말이다. 남북 간 대치상황이 지속될수록 한국은 한미동맹에 따라 미국에 대한 군사적 의존도가 높아지고 북한 역시 중국에 대한 전략적 의존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정황이 계속되면 남북한 대화로 풀 수 있는 여지는 갈수록 줄어들게 된다.

둘째, 남북한 당사국간의 대화가 이어지면 주변국들은 대화의 속 내용에 대해 한국과 북한을 상대로 정보전을 펼치게 되며 서울과 평양당국의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이 북핵문제가 처음 불거져 나온 이래 지난 20여년의 경험에서 나온 결론이다. 한반도문제의 한국화가 비로소 시작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셋째, 남북한의 대화가 지속되면 양측 모두 국내에 대화 보다는 대립을 부추기는 집단의 목소리를 억제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관계 개선의 단초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처럼 남북 간 대화는 신뢰구축의 첫 출발인 동시에 한반도의 장래를 직접 당사국인 남북한이 만들어 갈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는 절대 절명의 수단이며 목표이기도 하다. 아울러 새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궤도에 올라 점진적일지라도 새 정부가 지향하는 평화롭고 안정된 상생의 한반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남북관계의 선순환 구도로 진입이 가능해 진다.

남북대화의 첫 단추는 인도적 대북지원에서

신뢰프로세스의 첫 단계로 돌입하기 위해 시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아무래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듯싶다.

특히 북한의 취약계층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응급식량 지원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의 남북관계를 보면 한국정부나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을 북한당국이 선뜻 수용할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세계식량계획(WFP)이나 유니세프(UNICEF) 등 국제기구를 통한 한국의 실질적 지원 역시 한국 새 정부의 선의를 북측에 전달하는데 효과 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성을 갖고 인도적 대북지원에 나선다면, 그리고 정치적, 군사적 정황과 무관하게 말뜻 그대로 인도적 지원을 실행한다면 새 정부 대북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조치가 될 것이며 향후 남북관계를 한국정부의 큰 그림에 따라 이끌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대화의 다양성이 필요해

하지만 수년간 실질적으로 단절되었던 대화의 물꼬를 트고 또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 작업은 아니다. 지난날의 경험에 비춰볼 때 단선적인 남북대화는 언제든 단절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화의 창구도 다양화하고 어젠다도 다양화해야 한다. 아울러 남북한만이 아닌 유관국들이나 국제기구가 함께 참여하는 대화의 형태 역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한마디로 대화의 네트워크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대화의 어느 한편의 경우가 작동하지 않을 때는 다른 쪽의 대화를 유지 혹은 활성화하며 남북 간 대화의 모멘텀이 사라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관리해 나가야 한다.

북한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기존의 6자회담을 재가동하는 노력을 해 가면서 다른 한편으로 한국과 미국 및 중국이 참여하는 실질적인 대화창구도 새롭게 시도할 필요가 있다. 6자회담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제기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6자회담에 무게를 실어줌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에 중국의 책임감을 가중시키는 외교적 계산도 필요하다고 본다.

핵문제 해결과 평화체제 논의는 병행할 수밖에 없어

북한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것이 북한의 의도대로 진행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런 반론을 펼치는 이들은 북한의 장거리미사일과 핵실험의 파장을 너무 안이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좀 더 절박하게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고민하고 해법을 찾으려 한다면 핵문제 논의와 평화체제 논란을 병행 추진하는 데 시비를 걸 이유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정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며 국제사회 속에 한국의 외교적 위상과 역량을 감안할 때 일부의 우려처럼 북한의 계산에 휘둘리는 결과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다만 문제해결을 위해 좀더 복잡한 다차원 방정식을 풀어가야 할 것인바 한국의 새 정부는 전문성을 갖고 국내 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전략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대북협상에 임해야 한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의 근간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말 그대로 신뢰를 축적해 가는 '과정'이다. 다만 방향성을 갖고 추진해 가는 목표 지향적 과정이다. 그리고 그 목표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상생의 한반도가 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분단해소의 진정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갈 수 있을 것인바 박근혜 새 정부의 임기 5년이 그러한 방향성 있는 작업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統**